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 11. 23 (금) 15:00 ~ 16:30

〈세션2〉 기본소득의 재원

사회: 신종화 (인천대)

발표1: 통화정책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안현효 (대구대)

발표2: 제주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가능성 검토

이재섭/최현 (제주대)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안현효(대구대학교)

- 1절. 문제제기
- 2절.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서의 QE
- 3절. QE에서 헬리콥터 머니로
- 4절. 헬리콥터 머니를 통한 기본소득 자원 마련
- 5절. 소결

키워드: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 기본소득.

1. 문제제기

기본소득의 쟁점은 이론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 쟁점은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미래 지향,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한 노동계약체제의 변화, 근로의욕(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고, 정책적 쟁점은 기본소득이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기본소득의 지급 형태, 기본소득의 자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자원에 관한 쟁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의 자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다(강남훈, 2011). 조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 대표적인 간접세인 판매세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과세금액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 대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재분배 정책으로 보여진다(백승호, 2010).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알래스카 영구기금 (APF:Alaska Permanent Fund)와 같은 자연자원은 공유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생각되고 이 소득은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쉽게 기본소득의 자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공유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다양한 자원을 고려할 수 있다(금민, 2017). 토지가 대표적인 예다. 토지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지만 다른 자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공적 소유의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토지에 대

해 매기는 세금, 즉 토지보유세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토지 뿐 아니라 환경도 공유부로 간주할 수 있다. 권정임(2011, 2012), 강남훈(2013)은 생태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제안한다. 일단 공유자원을 세금의 재원으로 간주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자원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강남훈, 2016), 로봇세(Delaney, 2017), 지구공유재(곽노완, 2018), 인지(안현효, 2016) 등이 제안된다.

본 논문의 관심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관한 또 다른 대안으로서 화폐에 주목한다. 화폐는 매우 복잡한 존재이지만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한다.¹⁾ 경제학에서는 화폐를 계산단위(좀 더 나아가면 교환수단)으로만 보는 고전파적 시각과 일종의 자산, 특히 유동성을 가진 무수익 자산, 즉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보는 케인스적 시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므로 화폐는 경제학의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양분하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

또한 화폐에서 신용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 생산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동학적 움직임, 즉 자본주의의 경기순환 과정에 주요한 변수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렇듯 화폐는 매우 복잡한 상품이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화폐에 주목한 논의로는 Douglas(2012)의 사회신용론을 들 수 있다. 일본 학자 세키 히로노(2010)는 클리포드 더글라스의 사회신용론을 수용하여, 현재와 같은 신용화폐가 아니라 정부통화를 발행하여, 은행돈(이자 붙는 돈)으로 움직이는 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부통화로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무조건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기 활용된 통화정책의 무력화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 논의의 발전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에 관한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서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라는 용어는 극히 최근의 용어다. 2001년 일본은행이 최초로 시행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Ueda, 2012). 그런데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장기 불황에 직면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이자율 하락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많은 나라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불황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단

1) 인간이 직접 만든 재화가 아닌 존재 중에서 자본주의에서 상품화에 성공한 것은 노동력이 대표적이고, 다음으로 화폐가 있다.

기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어 경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극심한 불황 상황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이미 0 수준에 도달하여 정책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른바 zero lower bound constraint(ZLB)라고 불리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의 상태에 빠지면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게 된다. 그래서 단기국채를 매입해서 단기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 정책을 대신해서 장기국채, MBS(모기지유동화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등 다양한 채권을 매입하여 경제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부른다. 얼핏 보면 통화를 팽창한다는 점에서, 또 채권을 매입하여 이자율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정책과 비슷해보인다. 하지만 양적 완화가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것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전달경로가 전통적 통화정책과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단기국채를 통한 단기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에 비해서, 장기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양적 완화 정책은 경제 이론에서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적용되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일본인데, 2001~2006년 사이에 일본은행이 40조 엔 규모로, 2010년~2011년에는 101조엔 규모로 채권을 매입했고, 2012년 매입규모를 확대하고, 2013년에도 80조 엔의 자산매입을 계획하였다. 2013년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중앙은행의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2008년~2012년 기간 중 3차에 걸쳐 수조 달러가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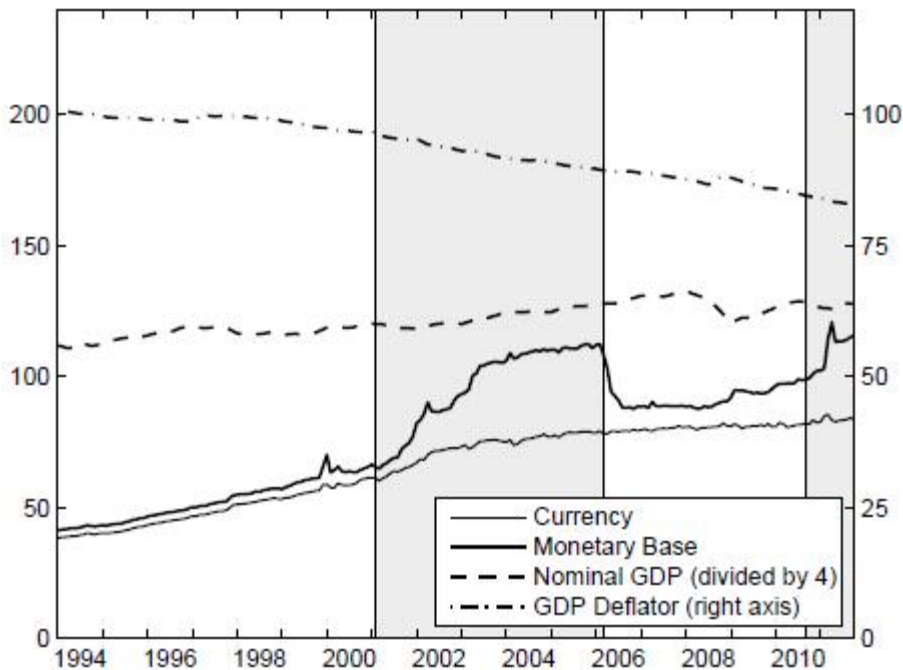
미국의 양적 완화 (Woodford, 2012, 96~98)	
1차 양적완화	<p>2008년 11월 25일 : FRB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보증모기지 채권(GSE direct obligations)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을 매입하고 TALF라는 새로운 대출프로그램에 2,000억 달러를 투입</p> <p>2008년 12월 16일 : 연방기금금리를 종전 1.00%에서 0~0.25%로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통화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완화'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p> <p>2009년 1월 28일 : FRB는 장기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p> <p>2009년 3월 18일 : FOMC는 앞으로 6개월 동안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p> <p>1차 양적완화는 2010년 1분기에 끝났으며 총 1조 7,000억 달러가 투입</p>
2차 양적완화	<p>2010년 11월 3일 : FOMC회의에서 6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양적완화(QE2)를 시행한다고 발표.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6월 30일 종료</p>

3차 양적완화	2012년 9월 13일 : FOMC는 매달 400억 달러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기로 결정. 아울러 2014년 말로 예정된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 3차 양적완화 시즌2(3.5차 양적완화) 2012년 12월 13일 FOMC는 매달 45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85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결정
---------	--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양적완화로 엄청난 게 불어난 연준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양적 완화 정책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한편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2009, 3월)이 750억 파운드의 장기국채 매입을 결정하고, 유럽중앙은행(ECB, 2015, 1월) 100억~6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양적 완화는 실제로 이루어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장기이자율에 영향을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큰 영향을 주고, 장기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영향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 이득이며, 장기저축자에게 손해가 된다. 그렇다면 거시적 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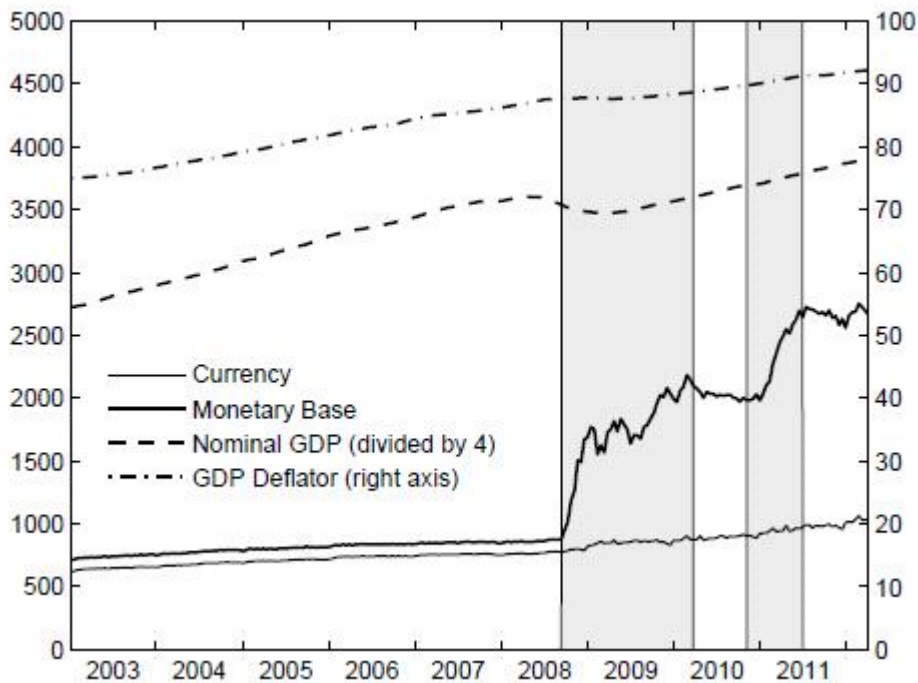
<그림1> 일본의 양적 완화 1기와 2기 (단위: 조 엔)

출전: 일본은행

2001~2006년 간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행의 경우 지금을 첫 2해 동안 60%

나 증가시켰는데, 명목GDP의 상승은 5년간의 양적 완화 이후 2001년 대비 6%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Woodford, 2012, 57참조).

미국의 경우에서도 양적 완화의 규모에 비해 명목GDP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에의 영향은 기대 이하였다.



<그림2> 미국이 양적 완화 1기와 2기 (단위: 10억 달러)

출전: 연방준비은행

이러한 실제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적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전통적 생각에 의하면 민간과 은행의 자산구성이 유동적이면, 통화량이 증가해도 민간은 지출을 꺼려하고, 은행은 대출을 꺼려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유동성이 더 투입이 되어도 결국 흡수되고,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자산으로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유동성 함정).

이에 반해 새로운 생각은 QE로 시장에 장기채권이 흡수되어 장기이자율이 떨어지면, 장기채무를 매칭하기 위해 장기국채를 보유한 연금기금들은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자산, 즉 기업채나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황기에 흔히 채택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이자율을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QE는 이러한 불황정책이 초래하는 장기이자율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자산 공급, 자산 가격과 실질 거시경제 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작았은데, 금융위기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이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변동은 이자율의 차이가 많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예상하는 대로 QE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것은 실증적 문제로 보인다.

그러한 양적 완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Joyce, Tong & Woods(2012)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영란은행이 2천억 파운드의 QE를 시행했을 때, 장기이자율은 1% 하락했고, GDP는 1.5~2%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 0.75~1% 증가가 나타났다.

3. QE에서 헬리콥터 머니로

QE의 경우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통화정책에 속하지만 장기 채권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비정통적 통화정책으로 간주된다. 장기 국채의 매입은 장기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헬리콥터 머니는 프리드만이 한 말로,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을 뿌리면서 그 돈을 경제주체는 계속 반복되는 이벤트가 아닌 한번의 이벤트로 확신한다고 가정하였다(Friedman 1969: 4~5).

이는 중앙은행(정부)의 0의 이자율 수준에서 예산 제약 범위 내에서²⁾ 진행되는 지금(monetary base)의 명목량에 대한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인 증가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비가역적 국가화폐 발행을 재원으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병행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는 QE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QE와 같이 장기국채를 매입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출의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구분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헬레콥터 머니는 화폐를 직접 찍어내어 (통화적 자금조달)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제도를 무시하고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QE와 무관하게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헬레콥터 머니의 이론적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QE 때문이다.

한편으로 헬레콥터 머니는 QE와 마찬가지로 경기진작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QE의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 시중의 자금을 실물투자로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므로 경제주체가 직접적 소비를 하는 유인이 없지만, 헬리콥터 머니의 경우 정부(재무부)가 상환의무가 없는 직접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는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QE를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 헬리콥터 머니가 더 효과적으로 수요 증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헬레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의 계정을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Buiter(2014, 26)은 헬리콥터 머니가 경기 정책이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헬리콥터 머니가 뿌려지면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해야 예산 제약이 유지된다.

“화폐임금과 물가가 경직적인 케인지안적 경제에서, 산출은 수요 의존적이다. 완전고용균형에서 최초의 실질이자율은 낮고,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율이 낮다. 이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 실질지출 감소와 같은 총 수요 충격이 있다고 하자. 이는 사전적 과잉저축 상황을 야기한다($S-I > 0$). 그러면 완전고용균형은 (-)의 실질이자율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의 실질이자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명목이자율이 더 떨어져야 한다(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그런데 이 둘 다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최초의 수요충격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것이고, 명목이자율은 통화유지 비용 보다 커야 하므로 (-)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완전고용 수준에서 새로운 실질이자율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

가능한 실질이자율 수준에서 완전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 충격이 있어야 한다. 팽창적 재정정책이 명백히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헬리콥터 머니는 통화와 재정의 결합된 경기진작 정책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조건이 있다. Buiter(2014)는 헬리콥터 머니가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 ①금전적 수익률보다 화폐보유의 (비금전적) 이득이 커야 한다. 즉 단순한 누메레르(nemeraire: 계산단위)로서의 화폐라면 효과가 없게 된다.
- ②국가화폐는 상환불필요해야 한다. 이 경우 화폐의 보유자는 이를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한다.
- ③화폐가격이 (+)여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심지어 영구적인 유동성 함정의 상황 속에서도 통화 금융정책이 결합하여 무제한적인 민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결국 디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적 스태그네이션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헬리콥터 머니가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국가화폐가 이를 보유한 민간에게 순 부(net wealth)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환필요가 있는 채무의 형식으로 재정지출의 자금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McCulley & Pozsar(2013) 역시 같은 주장을 한다. 불황기에 채택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민간신용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통화정책이 재정책확장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즉 헬리콥터 머니)이다.

불황기에 유동성 함정으로 통화정책은 기업(민간 채무자)이 통화정책에 반응을 안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재정정책이 효과적인데, 재정정책에 소요되는 자금 동원과 관련하여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현실이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의 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은 직접적 지출을 증가시켜 통화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재정지출에 동원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키지 않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통화 정책 그 자체만은 아니고 민간 부문이 디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자극과 결합한 통화정책이라는 점에 핵심이 있으며, 통화정책이 재정당국의 채무비율(채무/GDP)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이 정책은 민간 부문이 디레버리지만는데 필요한 명목소득증가를 유도하는 확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독립성 명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만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재정당국과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헬리콥터 머니가 적용 가능한 나라로서 대외 제약이 없는 폐쇄경제의 대국(영국, 미국, 유럽 흑자국)을 들고 있어 헬리콥터 머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조건을 달고 있다.

재정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헬리콥터 머니를 발행할 수 있다면, 통화의 과당 발행으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화폐 유통 속도에 좌우된다. 통화주의의 화폐수량방정식은 아래와 같다고 하자.

$$MV=PY \text{ (M: 통화량, V: 화폐의 유통속도, P: 물가, Y=실질생산)}$$

이 때 증가율은 $m + v = p + y$ 가 된다.

V가 안정적이면 v는 0이 되고, m의 증가는 p 또는 y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v가 감소한다면 (즉 유동성 함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m을 증가시켜도 p, y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v 감소를 상쇄시키는 m의 증가가 필요하다. 헬리콥터 머니는 m을 팽창시키는 방식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v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m의 증가는 p, y의 급팽창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v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동성 함정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폐를 민간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화주의에 의하면 화폐유통속도 v의 움직임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로 화폐유통속도 v의 안정성(또는 v가 예외적으로 높은 유동성 함정의 시기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회피하고 헬리콥터 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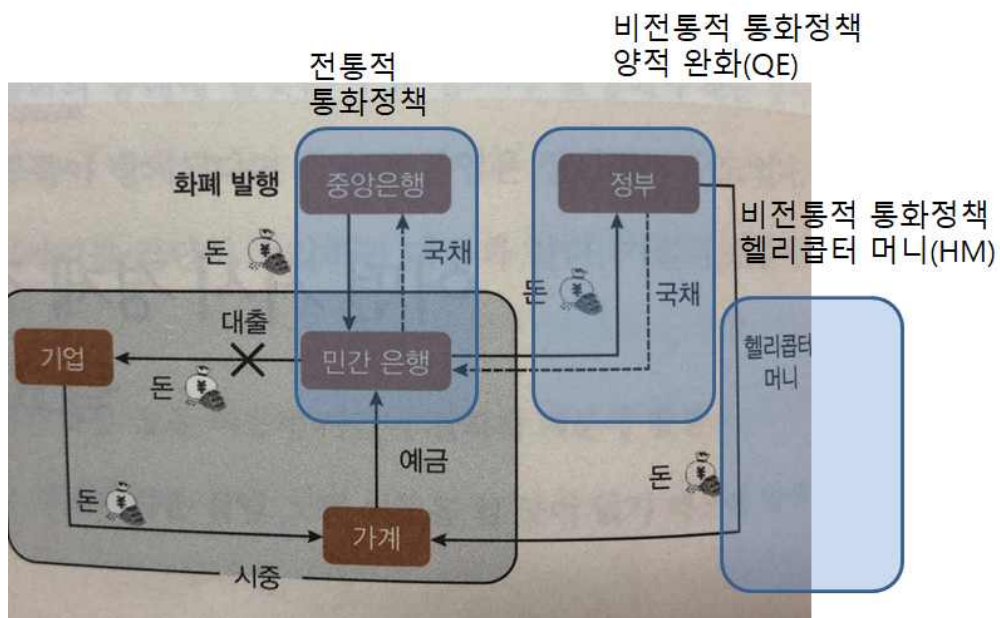
4. 헬리콥터 머니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헬리콥터 머니 또는 변형된 QE가 등장하는 배경으로는 소득불균형의 악화 문제가 있

다. Xing(2017)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QE로 인해 자산가격의 회복 과정에서 자산을 많이 갖지 않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악화되는 소득불균등 현상이 심해졌고 이는 비전통적 정치지도자(anti-establishment political candidates)의 등장을 야기했다고 해석했다. 다른 QE와 달리 헬리콥터 머니는 화폐를 공평하게 뿌려주는 것이므로 소득불균등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QE는 자산가격의 회복에 역점을 두는 것인 반면, 헬리콥터 머니는 소비 확산을 통한 총수요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QE들이 장기국채를 구입할 때 자산가들은 이자율이 떨어진 장기국채를 포기하고, 다른 위험 자산, 즉 주식 등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 투자가 진작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이 정책이 임금상승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산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계급적 정책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노출하고 있다.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이 증대하고 적절한 임금상승이 동반된다면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QE정책은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적 임금양극화 등이 결합하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게 되면 QE는 소득불평등에 더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과감한 정책 제안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이미 앞에서 제기된 버넵키(Bernanke)의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제안 외에도,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의 "민중적 QE"(People's QE) 제안들이 있다(Xing, 2017). 코빈의 민중적 QE는 영란은행이 화폐를 찍어 정부부채를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추가적 정부지출의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지출은 노동자 교육과 직업 창출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민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통화정책의 여러 종류 (이노우에 도모히로, 2016: 130에서 변형)

<그림>은 지금까지 논의된 통화정책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통적 통화정책(금융긴축

또는 금융완화)의 경우 단기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단기 채권을 매입(이자율 하락, 통화량 증가)하거나, 매각(이자율 상승, 통화량 감소)하여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반면 2001년 이래 등장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장기 국채를 정부가 직접 매입함으로써 장기이자율도 낮추고 시장 통화공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국가통화를 발행하지만 (중앙은행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국채의 매입과 연동되어 있어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투자 진작을 전달경로로 하는 것이다. 반면 마지막에 등장한 헬리콥터 머니의 경우 직접 발행하는 화폐를 가계에 공급하여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QE를 활용하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의 하나는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총량에서는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하다. 문제는 구체적 상황 (시점과 나라) 속에서 그 재원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주된 방안은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 지출을 하는 방안이다. 기본소득 자체는 개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간단한 정책 구조를 가지고 지급 방식에서 거래비용이 매우 낮다. 더욱이 재화, 서비스의 현물 공급보다 현금 지급의 경제적 후생효과가 높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같이 기술적 실업의 보편화 등에 대한 대응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은 우위에 있다.

첫째, 결국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접근법은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든, 판매세와 같은 간접세든 조세를 통한 것이다. 조세는 징수방법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게 된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 유럽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일어난다면 부유한 독일은 손해이고, 가난한 스페인은 이익을 보게 된다. 각 나라의 과세 금액의 총액을 다시 재 배분한다면 완전하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나라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인해 완전한 연방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Mencinger, 2017).

둘째는 불황 시에도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 문제는 불황기에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전통적 통화정책의 실패, 즉 이자율 하락이나, 본원통화의 증가를 통해 경기 침체를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차례에 거친 QE를 시행하게 된다. 헬리콥터 머니는 전통적인 QE 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QE의 경우 공개시장정책보다는 더 장기의 국채를 정부가 구입하는 방식인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보유하지만, 헬리콥터 머니의 경우 화폐를 비금융섹터(가계, 기업, 정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수혜자의 (금융적 부인) 순자산이 증가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없다. 그러므로 “헬리콥터 머니의 핵심은 모든 다른 통화정책이 실패할 때, 디플레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본원통화의 명목소득의 영구적 증가”(Mencinger, 2017: 6)로서 지나친 헬리콥터 머니는 악

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시기에) 적절한 헬리콥터 머니는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QE로 얻은 자산(부채)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려는 반면, 헬리콥터 머니로 얻은 자산은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ECB는 매달 800조 유로를 QE에 사용한다면, 이 돈은 유로존의 3억2천5백만명에게 매달 246 유로를 주는 것과 맞먹는 규모로서, 이 금액은 M1의 1.06%, M3의 0.68%, GDP의 0.74%이며, 이는 한계소비(투자)성향 0.6 가정 하에 GDP 1.8%의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Mencinger, 2017: 7).

이와 같이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을 결합하면 조세에 기반한 기본소득의 재원이 아닌 새로운 재원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불황기 팽창적 화폐정책의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호황기에는 조세를 통한 재원 확보, 불황기에는 통화증발을 통한 재원확보 등의 혼합형 재원 마련 대책도 시도할 수 있다.

다른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AI 시대에는 만성적 과잉생산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점에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충분한 통화량에 의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이노우에 도모히로, 2016: 132). 일단 충분한 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느냐에 따라 거시경제적 효과 및 소득분배의 수준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의 결합은 기술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급격한 변화 및 소득분배의 악화 뿐 아니라 기술혁명으로 인한 생산성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도 적합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5. 소결

더글러스의 <사회신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재 인용되어 있다.

“회계적인 분석 방법에 따르면, 현재의 소매가격 수준에서 생산된 재화들의 가치는 영구적 원천에서 나오는 구매력의 흐름을 훨씬 초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달리 말하면, 경기 침체기가 반복되는 것은 현행 금융 및 기업 정책의 결과로 비춰진다.”(Douglas, 2012: 107 재인용)

이 말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총생산량>총수요량인 현상이 항상적으로 초래되며, 이를 매개해주는 화폐가 시스템 내에서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대 신용제도는 바로 신용(화폐)창조라는 현상을 통해서 경제가 필요로 하는 화폐를 공급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화폐금융론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화폐신용제도의 설명이다. 신용화폐론은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를 시스템이 스스로 생산해 내는 과정으로 설명한다(=내생적 화폐공급). 하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 수준에서 화폐를 외생적 공급으로 간주하고 설명하기도 한다.³⁾ 하지만 1) 경제에 화폐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2) 현재의 화폐신용제도(은행제도를 주축으로 하는)가 그 주체여야 한다는 것은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주조권(시노리지: seigniorage)을 회복하자는 화폐개혁론(Huber & Robertson, 2000)에서도 발견된다. Huber & Robertson(2000)은 현재의 화폐 은행 제도가 금속화폐를 기반으로 한 500년 전의 부분지급제도에 기초하고 있어,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현금 외에도 비현금화폐(non cash money)를 창출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에 사용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일반 상업은행은 화폐창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순히 금융중개자로서 신용브로커 역할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Huber & Robertson, 2000: 1~2). 이와 같이 대규모의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어 정부로부터 시중에 유통될 때 대규모의 주조차익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주조차익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소득분배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이 주조차익을 바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3) 이 두 가지 접근법은 화폐를 바라보는 학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화폐를 단순한 교환수단, 또는 가치척도로만 보는 고전파의 경우는 화폐가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고, 따라서 공급=수요의 항등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비판적인 케인스의 경우 화폐는 가치저장수단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주장한다. 전자에서 화폐는 외생적 통화이며, 후자에서 화폐는 내생적 통화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 (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 효과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76-98.
- 강남훈. (2013). 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소득 재분배 효과. *사회이론*, (43), 239-265.
- 강남훈. (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 12-34.
- 곽노완. (2018).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마르크스주의 연구*, 15(3), 154-175.
- 권정임. (2011). 생태사회와 기본소득-고르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22(3), 1-40.
- 권정임. (2012).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12-41.
- 금민. (2017). 공유자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FUTURE HORIZON*, (34), 18-21.
-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 안현효. (2016).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마르크스주의 연구*, 13(2), 68-91.
- 세키 히로노(2010), *사회신용론과 기본소득*, 녹색평론 통권 제111호
- 이노우에 도모히로(2016),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김정환 역, 다운북스
- Bernanke, B. S. (2002). Deflation: Making sure "it" doesn't happen here (No. 530).
- Buiter, W. (2014). The simple analytics of helicopter money: Why it works-always.
- Douglas, C. H. (2012), *Social Credit*, 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역사비평, 2016
- Delaney, K. J. (2017). Droid duties: The robot that takes your job should pay taxes, says bill gates. <https://qz.com/911968/bill-gates-the-robot-that-takes-your-job-should-pay-taxes/> [accessed on 06/01/2017].
- Den Haan, W. (2016). Quantitative Easing. Evolution of economic thinking as it happened on Vox, CEPR.
- Farmer, R. E. (2012). Qualitative easing: how it works and why it matters (No. w1842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Friedman, Milton (1969). The Optimum Quantity of Money, in Milton Friedman, *The Optimum Quantity of Money and Other Essays*, Chapter 1. Adline Publishing company, Chicago.
- Huber, J., & Robertson, J. (2000). *Creating new money: a monetary reform for the information age*.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 Joyce, M., M. Tong and R. Woods (2011), "'The economic impact of QE:

- Lessons from the UK", Vox EU.org, 01 November in Den Haan, W. (2016). Quantitative Easing. Evolution of economic thinking as it happened on Vox, CEPR.
- McCulley, P., & Pozsar, Z. (2013). Helicopter money: or how I stopped worrying and love fiscal-monetary cooperation. Global Society of Fellows, 7.
- Mencinger, J. (2017). Universal Basic Income and Helicopter Money. Basic Income Studies, 12(2).
- Ueda, K. (2012), THE EFFECTIVENESS OF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Y,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2012, vol. 63
- Woodford, M. (2012), "Methods of Policy Accommodation at the Interest-Rate Lower Bound", paper presented at the 2012 Jackson Hole symposium (available at <http://www.columbia.edu/~mw2230/JHole2012final.pdf>).
- Xing, V. (2017). Central Bank Quantitative Easing as an Emerging Political Liability.